

#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 더 미룰 수 없어”

고용노동부  
“노란봉투법 개정안  
갈등·불법과업 조장”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확정고시  
이정식 장관, 고시 계기로 현장방문  
사업주·근로자 애로사항 경청  
“결정체계 등 관련 논의 본격화”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해 이달 중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논의체를 출범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대전 대덕구 소재 한미타올을 방문해 “최저임금 제도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이달 중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논의체를 구성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현장의 의견들도 세심하게 수렴하면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2025년 최저임금 결정 고시를 계기로,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식 장관은 먼저 생산공정을 둘러보고 현장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대전 한미타올을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있다. /고용노동부

을 격려했다.

이후 진행된 차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사업주로서 겪는 다양한 경영상의 애로사항, 근로자들은 업무 중이거나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생각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이 장관은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

금 1만30원을 확정고시했다. 올해보다 1.7%(170원) 인상된 금액이고,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 1만원을 돌파했다”면서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을 두루 살펴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사

업주와 근로자 여러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전달해 주신 애로와 건의들은 돌아가서 세심하게 검토하고,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전자관보에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만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의결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나, 노사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은 지난 2020년 회의 이후 4년 만이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 산업부, 인니서 한국어·기술 교육으로 조선인력 양성

인니 세랑 ‘해외조선인력센터’ 개소  
조선해양플랜트협-인니 노동부 협의  
국내서 재교육 없이 즉시 현장 투입

정부와 조선업계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 현지에서 우수인력을 양성해 국내 현장에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인도네시아 세랑(Serang)에 ‘해외조선인력센터’를 개소하고 현지에서 한국어와 기술 교육을 통해 우수 조선인력을 양성해 국내 조선현장에 도입하는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산업부 주관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에서 제안된 후, 한국 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인도네시아 노동부가 5개월여간 협의를 거쳐 결실을 맺게 됐다.

국내 조선산업은 현재 3~4년치 일감에 해당하는 3912만 CGT(8월2일 기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도크에서 선박이 건조되는 모습

/HD현대중공업

준)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선종 중심의 선별 수주를 통해 산업체질과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등 재도약 기회를 맞고 있다.

다만 그간의 장기 불황에 따른 생산인력 이탈로 생산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비자 제도 개선과 인력양성을 통해 지난해 약 1만6000명의 생산인

력 공급을 확대한 바 있으나, 업계에선 양질의 외국인 숙련공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이다.

해외조선인력센터는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우리 조선현장 특성에 맞는 기술교육을 현지에서 사전 시행해 국내에서 재교육 없이 조선현장에 즉시 투입해 안정적 우수인력 공급채널을 구축하고, 현지 국가와 산업협

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센터에서 3개월간 1차로 30~40명을 대상으로 한국 조선사들이 요구하는 용접기술을 교육하고, 조선업에 적합한 선급 용접자격증 취득과정을 진행한다. 아울러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능력시험(TOPIK), 사전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인니 정부는 교육생 모집·교육·시설 제공 역할을 맡고, 한국 조선협회는 전문가 파견과 테스트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점을 보완해 가면서 교육생 확대 등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다 국가로의 확장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적개발원조(ODA) 연계,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지원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노사발전재단  
우즈베크 노동법 개선 위해  
근로감독 노하우 전수

노사발전재단은 오는 9일까지 우즈베키스탄 노동법·제도 개선 정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 퇴치부(MoEPR) 주요 인사를 한국에 초청해 연수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노사발전재단은 올해부터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퇴치부와 함께 우즈베키스탄의 근로감독 제도 개선과 근로감독관 교육체계 정비,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3년간의 고용노동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시작했다.

/김대환 기자

## 환경부, 일회용품 회수함 통해 재활용 확대 박성택 “기업환경 불확실성 최소화 앞장”

(신임 산업1차관)

광화문~남대문 일대서 연말까지 시행

환경부가 광화문~남대문 일대 에코존에서 ‘일회용품 회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자원순환보증금센터는 사업 운영을 담당한다. 관할 지자체인 중구와 종로구는 길거리 회수함 관리를 맡는다.

시범사업의 주요 목표는 소비자들에게 개인컵과 다회용컵을 먼저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불가피하게 포장용으로 사용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컵(일회용컵)을 회수해 재활용을 확대

하는 것이다.

일회용컵은 고품질의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상당수 일회용컵이 제대로 분리배출·수거되지 않고 종량제봉투 등으로 배출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환경부와 서울시 등은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시범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한 42개 커피전문점에는 사업 성과분석 등을 위해 마련된 별도의 표식이 있는 일회용컵이 제공된다. 매장별로 일회용컵 회수함이 설치된다. 회수된 일회용컵은 전문업체에 의해 수집 운반된 후 재활용업체에 공급돼 리튬용 섬유,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된다.

/김대환 기자

“불필요 규제보다 불확실성이 더 나빠”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신임 1차관(사진)은 5일 “무엇보다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데 산업부가 앞장 서자”고 말했다.

박 1차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통상 리스크와 공급망 리스크는 기업 혼자 힘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불필요한 규제도 나쁘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확실한 규제는 더 나쁘다”며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기업이 시간을 허비하게 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관련 주요 현안에는



산업부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자”며 “기업활동과 성장의 자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제도가 설계되고 집행되도록 산업부가 나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박 신임 차관은 보다 과감한 부처간 협업을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 글로벌 산업 전쟁은 개별 기업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싸움이 아니다”며 “경영자, 근로자, 협력업체, 오픈이노베이션 등 기업을 둘러싼 생태계가 플랫폼으로 경쟁하는 것”이라고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내진시험 기반  
성능검증 인증 취득

한국수력원자력이 내진시험 기반으로 원전 내진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인증을 취득했다고 5일 밝혔다.

한수원은 그동안 내진시험 시 외부 내진시험기관을 이용해 왔다. 이번 인증 취득을 통해 중앙연구원 구조내진실증시험센터에 설치된 진동대를 활용해 원전에 사용되는 설비 및 부품의 내진 실증시험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김대환 기자